

비상경제차관회의
(23-32차-②번 안건, 공개)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경제 형벌규정

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

2023. 10. 1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 . 3차 과제 추진 방향	1
II . 3차 과제 개선 내용	2
III . 향후 추진계획	5
[참고] 3차 과제 요약	6

I. 3차 과제 추진 방향

◇ ‘규정 + 법률 단위’ 투트랙 검토로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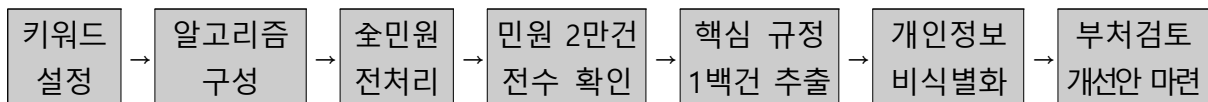
- 국민신문고 DB분석, 법령입안심사기준 기반 전수조사, 법률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총 46개 규정을 개선

① 국민신문고 DB분석을 통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 발굴

- 국민신문고 DB분석(기재부·권익위 협업)을 통해 국민이 직접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 발굴
- 키워드*를 설정하여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통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유관 민원을 추출하고, 연관조항을 세부 분석해 개선방안 마련

* ‘형벌, 징역, 벌금’ 등 형량 키워드 + ‘소상공인, 자영업, 가게’ 등 업종 키워드 + ‘불만, 부담, 생계, 애로’ 등 고충 키워드를 종합

<국민신문고 DB분석 과정>



②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제 형벌규정 전수 검토·개선

- 5,500여개 경제형벌 규정 전수 대상 행정제재 전환 필요성 검토
-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적용하여, 경미한 의무위반* 사항은 전과자 양산, 낙인효과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제재 전환
- * (주요 유형) 신고·보고의무 위반, 행정적 검사·조사 등의 거부·방해 또는 기피, 교육의무 위반, 유사 명칭 사용, 서류 보존의무, 인력 선임의무 위반 등
- 규정 내용, 연구기관(법제연·형정원) 검토 의견 등을 고려해 입법목적 달성 및 중대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

③ 법률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법률 개선방안 마련

- 한국법제연구원, 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주요 경제 법률* 집중 검토를 위한 법률별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
 - * 환경, 국토, 해양·수산, 공정거래, 산업 등 쏠분야에서 민간의 개선 요구가 많은 법률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 법률 선정
- 각 형벌의 완화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강화 등 합리적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실질적 법익의 제고를 도모
- 해당 법률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 및 규정별 개선방안 검토
 - 소관부처 검토 결과 즉시 개선 가능한 규정을 3차 과제 포함
 - 워킹그룹의 개선방안은 3대 검토원칙(비교형량·과잉금지·일관성)에 기반한 법무부·법제처 및 소관부처의 집중 검토를 통해 개선 추진

II. 3차 과제 개선 내용

① [총괄] 10개 부처, 22개 법률, 46개 형벌규정 개선 검토

- (개선사유)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·일관성 제고,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,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 완화
 -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,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개선 대상에서 제외
- (개선방향)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,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·비례성 등 법원칙 고려
 -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발굴한 사문화된 규정도 국민 재산, 안전 등에 우려가 없는 한 적극 합리화
- (개선방식) 40개는 행정제재 등 활용해 개선(행정제재 전환 20, 선행행정제재-후형벌 전환 19, 기존 조항 등 활용 1), 6개는 형량 조정

합 계	행정제재 등 활용			④형량조정
	①행정제재 전환	②先행정제재 →後형벌 전환	③기존 행정제재 조항 등 활용	
46개	20개	19개	1개	6개

- * ①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경우 ②행정조치를 통한 집행력 확보가 가능한 경우
 ③중복제재·규율 등이 이뤄지는 경우 ④비례성, 일관성 고려시 형량이 과도한 경우

② [개선분야] ①생활밀착형 규정 14개, ②행정적 의무 위반 15개, ③사문화된 규정 10개, ④법률 단위 검토 7개 규정 개선

① (생활밀착형 규정) 옥외광고물법, 폐기물관리법 등 14개 규정 개선

- 국민신문고 DB분석 등을 통해 발굴한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국민이 직접 부담을 느끼는 규정이면서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

< 주요 개선내용 >

구성요건	기존	개선
● (행안부)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		
도시지역 등에 미신고(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) 광고물을 표시한 자	벌금 5백만원 이하	과태료 5백만원 이하
● (환경부)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		
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	징역 2년 이하, 벌금 2천만원 이하	과태료 1백만원 이하 (※고의·거짓 유지, 단순 부실입력만 전환)
● (복지부)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(제13조 제2항 단서 관련)		
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	벌금 3백만원 이하	과태료 3백만원 이하 (※기존 제재 활용)
● (문체부) 영화비디오법 제94조 제2호		
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	징역 3년 이하, 벌금 3천만원 이하	징역 2년 이하, 벌금 2천만원 이하 (*청소년보호법 §59 수준)

② (행정적 의무 위반) 자유무역지역법, 항만운송사업법 등 15개 규정 개선

- 법제처 「법령입안심사기준(2021)」에 근거해 선별하여 개선

< 주요 개선내용 >

구성요건	기존	개선
● (산업부) 자유무역지역법 제61조 제3호		
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	벌금 1천만원 이하	과태료 1천만원 이하
● (해수부)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		
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	징역 1년 이하, 벌금 1천만원 이하	과태료 5백만원 이하 (※등록 대상은 유지)
● (금융위)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6호		
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	징역 1년 이하, 벌금 3천만원 이하	시정명령 후 형벌 부과

③ (사문화된 규정) 교통안전법, 뉴스통신법 등 10개 규정 개선

-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고, 제·개정 5년 이상 경과한 규정을 선별해 개선

< 주요 개선내용 >

구성요건	기존	개선
● (국토부) 교통안전법 제63조 제4호		
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교통안전진단기관	징역 2년 이하, 벌금 2천만원 이하	과태료 2천만원 이하
● (문체부) 뉴스통신법 제35조 제1호		
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	벌금 1천만원 이하	과태료 2천만원 이하
● (해수부) 해수욕장법 제45조		
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	징역 1년 이하, 벌금 1천만원 이하	선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

④ (법률 단위 검토) 선원법, 채무자회생법 등 7개 규정 개선

- (선원법)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 기타 규정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금·유급휴가 미지급 등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
- (채무자회생법) 사기파산 등 채무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이 규정되어있는바 구인 등의 절차에 관한 처벌은 지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구인불응은 행정벌로 전환

< 주요 개선내용 >

구성요건	기존	개선
● (해수부) 선원법 제170조 제3호, 제4호		
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	징역 2년 이하, 벌금 2천만원 이하	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형량 조정 (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)
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선박소유자		
● (법무부) 채무자회생법 제653조		
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	징역 1년 이하, 벌금 1천만원 이하	과태료 5백만원 이하

Ⅲ. 향후 추진계획

□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 입법절차 추진(10월~)

- 법제처 중심 일괄개정절차로 진행(1차, 2차 과제*와 동일)

* 일괄개정으로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 및 국회 제출 완료('23.1, '23.5월)

□ 경제 형벌규정 4차 과제 추진(~'24.上)

- 업계 애로사항, 국민 건의사항 등 체감도가 큰 규정을 추가 발굴하여 민간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선 추진

* 부처 검토(11월) → 연구용역(1월) → 법무부·법제처 검토(3월) 및 개선안 확정

참고

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요약(총 46개)

연번	법률명	구성요건	개선방안
1. 생활밀착형 규정(14개 과제)			
1	폐기물관리법 §66·4의4(§18③ 관련)	폐기물의 인계·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1백만원 (거짓 입력 등은 유지)
2	대기환경보전법 §90·4의3(§39① 관련)	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3백만원 (거짓 기록 등은 유지)
3~4	정보통신공사업법 §74·3(§17①·1, 2 관련)	공사업의 양도, 합병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2천만원
5~6	영화비디오법 §94·2, §95·10 (§29⑤, §62② 관련)	(§94·2)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(§95·10)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	<형량조정> (§94·2) 2년, 2천만원 (§95·10) 1년, 1천만원
7	사회복지사업법 §55(§13② 단서 관련)	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	<기존 행정제재 등 활용> 과태료 3백만원
8	장애인복지법 §87·6(§59② 관련)	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자	<선행행정제재-후형벌> 사업정지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
9~10	항만법 §110·1(§12⑤ 단서, §58⑤ 단서 관련)	준공확인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	<선행행정제재-후형벌>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
11~12	옥외광고물법 §18②·1, 2(§3, §3의2 관련)	공공시설물 등에 미신고(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) 광고물을 표시한 자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5백만원
13~14	하천법 §96·3, §96·8 (§75③ 관련)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축, 개축,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허가나 타인의 토지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	<선행행정제재-후형벌> 원상회복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
2. 행정적 의무 위반 규정(15개 과제)			
15~20	자본시장법 §446·16, §446·54 (§91④, §186②, §113①, §280③, §338, §356 관련)	(§446·16)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(§446·54) 종합금융회사,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	<선행행정제재-후형벌> (제16호)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<행정제재 전환> (제54호)과태료 1억원
21~22	자유무역지역법 §61·3, §61·5 (§34①, §35③, §38③ 관련)	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등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1천만원
23	마리나항만법 §38·2(§18④ 관련)	준공 전 사용 신고를 하지않고 토지·시설 등을 사용한 자	<선행행정제재-후형벌>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

24	항만법 §110·3(§38① 관련)	항만시설소유자로서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·정밀안전점검·긴급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 등 점검을 미 실시한 자	<선행정제재-후형벌>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
25	항만운송사업법 §30·2(§26의3① 관련)	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5백만원
26	환경오염피해구제법 §47②·2(§17 관련)	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	<선행정제재-후형벌> 영업정지 등 선 행정명령 부과
27~28	하천법 §95·1, §95·6 (§14②, §39② 관련)	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	<선행정제재-후형벌>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
29	물류시설법 §65①·4의2(§21의2① 관련)	물류창고업 등록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1천만원

3. 사문화된 규정(10개 과제)

30	교통안전법 §63·4(§43 관련)	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교통안전진단기관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2천만원
31~32	뉴스통신법 §35·1, §35·2(§9① 관련)	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등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2천만원
33	불공정무역조사법 §40②·1(§7② 관련)	수출, 수입, 판매, 제조, 반입, 광고 등을 중지하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2천만원
34~37	수산업협동조합법 §177·1, 12, 14, 16 (§14①단서, §87, §90 관련)	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별수협의 구역을 시·군의 행정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	<선행정제재-후형벌>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
38~39	해수욕장법 §44·3, §45 (§36②, §37② 관련)	(§44·3)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(§45)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한 자	<형량조정> (§44·3) 1년, 1천만원 <선행정제재-후형벌> (§45)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

4. 법률 단위 검토과제(7개 과제)

40~42	선원법 §170·3, §170·4 (§55④, ⑤, §62⑤ 관련)	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,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선박소유자	<형량조정>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형량 상향(3년, 3천만원)
43~46	채무자회생법 §653(§319, §320, §322, §578의6 관련)	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	<행정제재 전환> 과태료 5백만원